

정부 복지예산 '획일적 국고보조' 개선 추진

교부·증부세 차등 배분도 서둘러야

'빈익빈 부익부' 지방재정 편중현상 해소 광주·전남 등 가난한 지자체 살림 '숨통'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로 자체 재원을 부담토록 하는 '매칭펀드' 시스템은 지방재정 격차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자체 수입이 미미한 농촌지역과 산업 고도화로 지방세 수입이 넘쳐나는 도시지역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국고 보조비를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사업 포기할 판=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최악이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재원 부담이 큰 복지정책 등을 확대하고, 획일적인 국고보조 시스템을 고치지 않아 지방재정이 크게 쪼들리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일반통행식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형편이 가장 어려운 광주·전남 지자체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할 실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총예산 3조 9천368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에 30%를 쏟아부어야해 심각한 재정운용에 큰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40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경우 복지예산은 지방세액 전체를 초과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수해복구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개발사업비가 그만큼 축소돼 지역발전을 더디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농촌지역의 농민 고교생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

료 등 학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국비지원 규모를 30%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를 도와 해당 시·군이 35%씩 부담토록 하다 2005년부터는 국비지원을 지역에 따라 10~18%로 더욱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촌지역 고교생 교육비로 부담해야할 지방비(도비+시·군비)는 전체 사업비 136억원 가운데 72%인 97억 9천만원. 국고지원비율이 낮아지기 전인 2004년 전체 사업비 87억원 가운데 지방비로 70%인 61억원을 부담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액수다.

◇합리적인 재정 정책 시급=광주·전남 등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정부가 획일적인 매칭펀드 시스템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2007 시·도별 복지예산 규모 (단위:억원)

시·도	전체예산	복지예산	복지예산 지방세 부담률
계	731,097	151,496	21.1%
서울	152,232	23,258	20.2%
부산	60,642	13,637	27.7%
대구	38,685	8,398	16.5%
인천	49,062	7,237	14.4%
광주	23,777	5,004	26.4%
대전	22,384	4,544	14.9%
울산	15,871	2,718	16.4%
경기	113,669	21,923	13.5%
강원	24,567	5,709	23.2%
충북	22,557	5,640	10.2%
충남	31,799	6,748	23.4%
전북	31,416	10,210	63.4%
전남	39,368	11,123	96.2%
경북	39,085	10,544	42.1%
경남	42,863	10,858	29.1%
제주	23,120	3,945	25.6%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가 국고보조금 보조비를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쳐 차등 지원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살이에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사업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배분할 경우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어 균형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만 들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촌지역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소 30%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정해야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활기를 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친노계열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조선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언론 때문에 노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범여권 대통합 안되면 대선 포기해야”

김혁규의원 조선포 특강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을 바르게 보도하지 않아서 국민의 지지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선포 사회과학대학 초청 특강에서 “노 대통령은 하기 힘든 개혁을 많이 했지만 언론과의 관계가 잘못돼 한 일이 정확히 보도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무슨 일이든 장단점이 있으며 노 대통령이 한 일도 부작용과 단점이 있다”며 “그것을 언론이 확대해서 부각시키다 보니 국민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범여권 통합에 대해서는 “여권 모두 목표는 같은데 지역

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 진전이 안되고 있다”며 “중심을 누가 잡느냐는 것을 논의하면 통합이 안 된다. 대통합이 안 되면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핵만 해결되면 북미 간 수교도 이뤄질 것이고, 한반도에도 긴장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며 “남의 기술력과 자본, 북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해 “개방을 통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며 “한미 FTA는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경제 고속도로를 개통한 것이어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 빨리 하라” 열린우리당의 5·31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범여권의 대통합과 국민경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시비 각오하고 국민뜻 전달”

정세균 의장 면담...“지금은 대통합이 대의이자 명분”

하되 만약에 여의치 않더라도 포기좌절하지 말고 차선의 방법이라도 현실화시키도록 행동하는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면담한 것과 관련, “박 대표의 생각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더라”는 찬평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장은 “우리당, 민주당, 시민사

회 등이 제3차대에서 모여 대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국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나 박 대표와의 입장차이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향후 범여권 인사 연쇄 면담과 관련, 주말로 예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의 예방을 한 전 총리의 사정으로부터 일당

연기했으며 추가로 확정된 면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혼수정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담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김 전 대통령 면담 내용과 형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박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 조인을 구할 때 겸손한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며 “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을 50분간 만나 45분간 말했다. 이를 상상해보면 박 대표와 대통합하게 얼마나 힘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시베리아 ‘평화의 철길’ 만들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반송하고 통째 갈비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캔사스와 폴로라도 도축장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통째가 포함된 것은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달 25일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정부가 그동안 유통시켰던 장맛빛 환상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미 FTA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한 “한반도의 미래는 백두대간을 끊는 대운하가 아니라 백두대간을 잇는 철길에 있다”면서 경원선을 복원, 목포에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평화의 철길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목포지역 FTA저지운동본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목포대 경영대학원에서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세계 최상의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및 정리·회수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예금보험공사

휴면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찾아가세요!

-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예금자께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의 휴면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 안내시스템 참조

구분	대상 금융권역	청구권 소멸시효	안내전화
휴면예금보험금	증권, 종금, 상호저축은행, 신탁	보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	02-758-1004 02-758-1114
	파산배당금	증권, 종금, 보험,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	법원 공탁후 10년



www.kdic.or.kr